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시민권, 고용사회안전망

이 승 렬\*

지난 8월호에서는 올해 상반기 고용 동향을 분석한 글이 실렸다. 이 글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은 3~4월 2개월간 계절조정 계열의 전월대비 수치로 볼 때,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앤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시휴직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 1998년이나 2008년의 위기와는 다른 특징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시직 노동자를 비롯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취업자의 감소는 한국판 뉴딜을 떠받치는 주춧돌로서 고용사회안전망의 재설계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없어진 일자리 약 200만 개 가운데 70% 정도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사이에 회복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8월 고용동향을 확인해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8월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전에 실시됨으로써 그 뒤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은 2.5단계)가 노동시장에 가져왔을 파급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9월 13일 당일부터 1주일간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 전환이 고용동향에 어떻게 반영되었을지 자못 궁금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88년 8월 25일에 설립되어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9월 23일 개원기념세미나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사회안전망(상병수당·병가제도)의 재설계, 새로운 사회경제를 향한 신사회협약 모색을 주제로 3명의 연구자가 발표를 하였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이 가운데 2편의 발표문을 고쳐 쓴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이미 지난 9월호에 실렸다.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필자에게는 다음의 내용이 더욱 눈에 들어왔다.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소정노동시간 26.1%, 초과노동시간 33.2%), 월평균 노동소득의 감소(28.7%),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비임금노동자가 상당하였다는 사실(약 8할), 비임금노동자의 일시휴업(약 4할), 비임금노동자의 매출액·사업소득 감소(약 9할)와 감소폭(평소의 약 4할 수준) 등이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코로나19'<sup>1)</sup>가 노동시장의 어느 곳에 강하게 타격을 입혔는지를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yeesy@kli.re.kr).

결과는 잘 보여주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일시휴업은 그나마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금노동자나 가입할 자격이 없는 취업자는 코로나19가 휘두르는 큰 칼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1차로 지난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예상보다 약 62만 명을 넘어서는 176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149만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다시 추석을 맞이하여 2차 지원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과 지원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졌다. 지급대상, 소득 파악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제기도 잇따랐다. 만일 실업부조나 고용보험이 일하는 사람(취업자)들에게 갖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져야만 하는 경제적 충격을 사회가 함께 나눠짐으로써 이 충격의 크기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1995년에 탄생한 고용보험제도는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겐 소외되어 있다.<sup>2)</sup> 물론 2012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올해 말에는 예술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실업부조제도에 가까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될 것이다. 이는 두 번째 논문이 말하는 “시장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자 근본적으로 “일하는 이들 모두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987년의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의 역사가 취업자의 절반에게 주었던 노동시장의 ‘시민권’이라는 자리를 이제 나머지 절반에게도 내어주고자 한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 특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가 가지는 의의가 아닐까 한다. 제대로 세워진 고용사회안전망이야말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더욱 높게, 크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연대를 향한 노사정의 열린 마음과 분발을 기대한다. 이 세 대목수의 노력에 모든 국민도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LI**

- 1) '약육강식의 코로나19'는 김훈 작가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말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의 두드러지는 아만은 약육강식을 제도화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 코로나19 시대도 이런 아만이 굳어지지 않을까”(서울신문 2020년 6월 16일 인터넷 기사).
- 2) 이병희(2020)는 취업자의 49.4%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5.4%를 제외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업자가 45.2%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이병희(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고용·노동브리프』 제95호, 한국노동연구원).